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중·일 정상회담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난춘지려(暖春之旅)’ 방일

중·일관계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과거사 문제, 동지나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포스트 고이즈미 내각의 핵심 외교과제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의 복원이었고, 아베 전 총리는 취임 후 미국보다도 중국과 한국을 먼저 방문하였다. 중·일관계는 아베 전 총리의 2006년 10월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 방중, 원자바오 총리의 2007년 4월 ‘용빙지려’(融冰之旅: 얼음을 녹이는 여행) 방일 등에 의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향한 개선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후임으로 등장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아시아 중시외교의 기치 아래 12월말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일관계는 일본의 대표적 친중 정치가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영춘지려’(迎春之旅: 봄을 맞는 여행) 방중으로 전략적 호혜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오면서 중·일 지도자는 국내외의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 속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휘발유세 인상’ 등으로 인해 비판이 가중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만두사건에 의한 식료품 불신, 열차 충돌사건, 장바이러스 등 전염병, 티벳 사태, 애국주의에 기인한 배타적 내셔널리즘 등으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일과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5월 6~10일 일본을 방문하였고, 5월 7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은 1998년 장쩌민 국가주석 이래 10년만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방일 직전 베이징에서 가진 일본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방문을 ‘난춘지려’(暖春之旅: 따뜻한 봄날의 여행)에 비유했다.

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의의

후쿠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총리관저에서 2008년 5월 7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산 농약 검출 냉동만두 문제, 티벳과 인권문제,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문제, 온실가스 문제,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중·일 양국 수뇌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과 ‘환경문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등 2건의 문서를 채택·발표했다. 이들이 서명한 이번 공동선언은 1972년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중·일 공동선언’이래 약 36년만이다. 중국은 이 공동선언에서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 온 과정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성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의 방문 정례화 및 셔틀외교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처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었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했다. 아울러, 군사분야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한층 활성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의 협력과 관련해서 일본은 중국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 해소, 하천 범람 방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첨단 환경기술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중국은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국제협약 구축, 즉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세계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일본측 주장에 중국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표> ‘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 중국은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한 점을 적극 평가
- 중·일 양국은 상호협력의 파트너로서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 메카니즘 구축
 - 방문 정례화 및 셔틀외교의 전개
- 정부·의회·정당 교류체제 구축
- 안보협력을 위해 군사분야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한층 활성화
- 일본은 후쿠다 총리의 올림픽 개막식 참가 긍정적 검토
- 쌍방은 역사를 직시하고 좋은 미래 건설
- 일본은 항구 평화와 공동 번영에 공헌하는 중국 지지, 중국은 일본의 유엔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
- 일본은 대만문제에 대해 ‘중·일 공동성언’(1972) 입장 견지
- 동지나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규정
 - 가스전 공동개발 조기해결 원칙 재확인
- 중국은 북·일이 납치문제 등 제반 현안들의 해결을 통하여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기를 기대
- 무역·투자·식품 안전에서 상호 협력 추진
- 중국은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국제협약 구축에 적극 참가
- 전세계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일본측 주장에 중국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
- 일본은 중국-티벳의 지속적 대화 요청 및 기대

이와 같은 중·일 정상회담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21세기 중·일 양국의 협력이 전방위에 걸쳐 업그레이드되어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일 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구조적 관계로 인해 환경·외교·안보 분야로까지 협력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일의 교역 규모가 2007년에 27조 1,644억원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구조적 관계가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전략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위한 양국 정상의 방문 정례화 및 셔틀외교의 전개,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 표시, 지난 4월의 자위대와 중국군의 핫라인 설치에 이어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고위급의 상호 방문 활성화 등의 전략적 의의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5월 7일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환경과 경제에 역점을 둔 실리·실용외교차원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이상의 전략적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중국 견제, 이를 돌파하려는 중국의 대일 전략적 접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차원의 대중국 외교, 중·일 경제의 구조적 관계에 의한 이해관계 확산 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